

---

#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도입에 대한 의견

---

2020. 11

#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도입 반대

## 1. 제도 개요

- 정부는 지난 8월 31일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이하 유보금 배당간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4조의33 신설)을 국회에 제출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 유보금 배당간주세 개요

- 목적 :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방지
- 적용대상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80% 이상 법인
- 과세방식 : 배당간주금액 × 배당소득세율
  - \*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 \* 유보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과오납 환급금 이자 등) - 차감항목(이월결손금·법인세·배당금 등)
  - \* 적정 유보소득 : [(유보소득 + 배당금) × 50%] 또는 [자본금의 10%] 중 큰 값

## 2. 중견기업계 의견: 유보금 배당간주세 신설 반대

- 중복과세 성격을 지닌 과세이며,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우려

- 법인의 이익에 대해 이미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여기에 유보금 배당간주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동일원천의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특히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 제외)은 법인세에 투자상생협력세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보금 배당간주세가 신설될 경우 과세 부담이 중첩됨
  - 법인세와 투자상생협력세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유보금 배당간주세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과세대상만 다를 뿐 기업의 소득에 대해 세 가지 세금이 부과

- 또한 기업은 유보금 배당간주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 배당을 집행하는 등 사내유보금 유출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

\*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제도와 유사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재무구조 개선 및 법인세 과세체계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말 폐지

## □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가중으로 투자 위축 및 성장저해 우려

- 중견기업은 세 가지(법인세, 투자상생협력세, 유보금 배당간주세)의 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조세부담 급증 우려

-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로 매출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기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더욱 증가

\* 기업규모별 실효세율(조세수첩) : ('17) 상출 17.1%, 중견 17.5%, 중소 12.8%, 기타 19.3%  
('18) 상출 18.2%, 중견 18.7%, 중소 13.5%, 기타 19.9%  
('19) 상출 21.2%, 중견 18.5%, 중소 13.4%, 기타 20.7%

- 투자상생협력세 과세대상 법인 및 세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조세부담도 급증('16: 59개 172억원 → '19: 364개 1,444억원)

###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추이>

(단위: 개,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중견	59	172	295	904	364	1,583	364	1,44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6	84	151	1,238	194	1,750	204	2,427
그 외 기업	73	277	383	2,137	355	3,787	410	4,673
총합계	158	533	829	4,279	939(26)	7,191(70)	978	8,544

주1) 출처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이며, ( )는 중소기업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및 산출세액

주2) 그 외 기업은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유보금 배당간주세가 신설될 경우 중견기업 81.8%('18년 기준 4,635개 중 3,793개)가 비상장사이며, 비상장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조세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

- 세 가지 과세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중견기업은 이익의 약 28.6%\*를 세금으로 부담하며,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인 25%보다 높은 세율로 이토록 과중한 조세부담은 중견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 할 것

\* 중견기업 조세부담율 법인세 실효세율 18.7%, 투자상생협력세 3%<sup>1)</sup>, 배당간주세 5.5%

<유보금 배당간주세 신설시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예시(세부내용 첨부 참조)>

수익(사업소득)	100억원
법인세	1천만원 + 98억원 × 20%(법인세율) = <b>19.7억원</b>
투자상생협력세	[100억원 - 19.7억원(법인세)] × 20% × 15% = <b>2.4억원</b>
유보금 배당간주세	유보소득 : 100억원 - 19.7억원 - 2.4억원 = 77.9억원 적정유보소득 = ①, ② 중 큰 값 ① 유보소득 × 50% : 39.0억원 ② 자본금 × 10% : 10억원 초과유보소득 39.0억원 × 배당소득세 14% = 약 5.5억원
총조세 부담액	국세(19.7억원+2.4억원+5.5억원)+지방세(2.8억원) = <b>30.4억원</b>

주1) 계산편의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100%, 자본금 1백억원, 자기자본 5백억원, 투자·상생협력 지출금 0원으로 가정

- 중견기업은 자금조달 시 내부 유보자금 비중이 65.2%\*로 높아 유보금 배당간주세 신설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본축적이 어려워 중견기업의 투자 및 지속성장을 저해할 것

\* 중견기업 자금조달원 : 내부 유보자금 65.2%, 시중은행 차입 23.5%, 회사채 발행 2.2%, 정부정책자금 활용 2.0% 順('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 광범위한 특수관계인 적용 문제

- 정부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세형평 차원에서 배당간주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개인 유사법인”으로 정의
- 세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임원 및 임원의 친족 등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어 “개인”과 유사한 법인으로 보기 어려움

1) 투자상생협력 관련 지출이 없을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기업소득이 유사한 수준이라면 법인세율이 약 3% 인상 되는 효과가 유사할 것(김학수,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투자상생협력 축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9)

\*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 : 임원의 임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친족,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친족, 법인의 임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 등
-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 (친족관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사용인 및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의 친족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배우자, 사용인, 보인 또는 본인의 친족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 등

□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 이익의 배당 여부는 회사의 경영 전략적 판단이며, 배당하지 않는 유보금은 현금성 자산이나 공장·기계설비·토지 등에 투자되어 유·무형자산으로 존재
- 따라서 기타 자산으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배당을 할 수 없음에도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간주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조세원칙에 위배

□ 적정 유보소득의 기준 문제

- 사내유보금 적립 이유는 경기변동·코로나 19·천재지변 등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장기 투자 목적, 차입 목적을 위한 부채비율 감축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
-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재무사정에 따라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 기업소득이 흑자라고 해도 급작스런 적자전환을 대비하여 유보금 비축이 불가피한 상황
- \* 중견기업 주된 경영애로 '자금조달 곤란' 응답 비중 : ('15) 11.6% → ('16) 14.0% → ('17) 13.4% → ('18) 14.7% → ('19) 18.1% (중견기업 실태조사)
- 이렇듯 업종별·기업별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적정 유보소득을 '유보소득의 50%' 또는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 기존 정책 개편 기조와 배치

- 정부는 舊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개편하면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시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고, 투자와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독려한 바 있음
- 유보금 배당간주세가 도입되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배당이 확대될 수 있으며, 최대주주 지분이 80% 이상인 개인 유사법인의 특성 상 소수의 주주에게만 이익이 환류될 것임
  - 이는 유보금을 활용한 투자·고용 등을 위축시켜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이익을 투자·고용·상생협력에 더 많이 환류하려던 기존 정책 개편 기조와도 맞지 않음

## □ 유보소득 배당간주세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는 없음

- 정부는 유사사례로 일본·미국 사례를 제시<sup>2)</sup>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이며 주주에게 미실현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유보금 배당간주세와 다름

### <유사 제도 비교>

국가		주요 내용
일본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율 50% 이상 보유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10~20% 추가 과세
미국 (인적 지주회사세)		주주 5인 이하가 지분율 50% 이상 보유하고, 수동적 소득이 60% 이상인 법인의 유보소득에 20% 추가 과세
한국	투자상생협력세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법인(중소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추가 과세
	유보금 배당간주세 (신설 예정)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80% 이상 보유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부과

2)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첨부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도입시 세부담 계산식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에 모두 적용되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100% 이상인 과세표준은 100억원의 A기업으로 가정(계산의 편의를 위해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활동은 0원으로 설정)

① 법인세 : 19.7억원

- 과세표준 100억원 구간 법인세율은 20%
- 공제·감면금액을 무시하고 세율만 고려할 경우 : 19.7억원

②투자상생협력촉진세 : 2.4억원

-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활동금액 0원
- 과세방식 : ㉞ 선택
  - ㉞ [기업소득 × 65%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협력)] × 20%
  - ㉞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 × 20%
- ㉞ : [과세표준(100억원)-법인세(19.7억원)]×15%×20%=2.4억원

③배당소득세 : 5.5억원

- 유보소득 : 100억원-19.7억원-2.4억원=77.9억원
- 적정유보소득 : ㉞, ㉞ 중 큰 금액이므로 ㉞ 적용
  - ㉞ (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 39.0억원
  - ㉞ 자본금 × 10% : 50억원
- 초과 유보소득 :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27.9억원
- 배당소득세 : 초과 유보소득×지분율(100%)×배당소득세율(14%)=3.9억원

④지방세 : (① + ② + ③) × 10% = 2.6억원

○ 과세금액 : ① + ② + ③ + ④ = 28.6억원